



Universiteit
Leiden

The Netherlands

한국인의 통일방식에 대한 숨겨진 선호: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Ward, P.W.; Denney, S.C.; Green, C.K.

Citation

Ward, P. W., Denney, S. C., & Green, C. K. (2024). 한국인의 통일방식에 대한 숨겨진 선호: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30(1), 137-163. Retrieved from <https://hdl.handle.net/1887/3719797>

Version: Publisher's Version

License: [Leiden University Non-exclusive license](#)

Downloaded from: <https://hdl.handle.net/1887/3719797>

Note: To cite this publication please use the final published version (if applicable).

한국인의 통일방식에 대한 숨겨진 선호: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피터 워드* · 스티븐 데니** · 크리스토퍼 그린***

❖ 요약 ❖

본고는 통일의식 연구에서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통해 한국 국민의 통일방식을 더 세부적이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통일의식을 측정하는 기존 연구 방법론은 직접 단답형 다항 선택식 문항으로 통일의 필요성, 시기, 통일관, 통일한반도의 정치체제 등 최종 체제에 관한 질문으로 측정해왔다. 그런데 각 변수 내 선택지에 대한 선호 혹은 비선호의 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에 어느 조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한 복합적 정책 설계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실

험적 조사설계를 활용하여 통일 후의 정치체제, 북한 지도부 정리, 노동당 당원 정리, 남한 기업의 북한 경제참여, 북한 지역 군대 주둔 문제 등 여러 차원의 속성수준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실제 선호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연합제보다 단일민주 정부에 대한 선호, 노동당 당원에 대한 민감한 직위의 배제와 지도부의 기소 등 여러 차원에서 강한 선호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국민의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를 보여줌으로써,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통일에 대한 정책설계를 위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통일인식, 통일방식, 컨조인트 분석, 여론조사, 북한

I. 서론

남북통일은 사회적이자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문제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어떠한 정부가 수립되고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고유환 2014, 241-278),

DOI: 10.35390/sejong.30.1.202402.006

* 제1저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레이던 대학교 교수

*** 레이던 대학교 교수

남북 간의 경제 격차를 어떤 재원으로 해소시킬지 등 여러 측면과 논란이 존재한다 (류덕현·홍석철 외 2019). 본고는 한국 국민의 통일인식 재조명에 초점을 맞추어 이 분야의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팀에서 한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여론과 통일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차원에서 통일인식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진환 2015, 72-93; 함인희·한정자 2000, 137-165; 온기수 2010, 35-75). 이론적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제도 통합과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화 정착 이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통일 비용은 여러 연구에서 예측된 바와 같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백대현·이재완 2015, 205-224), 비용 분배와 통합 기간도 의의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 적정 시기, 비용, 방식 등 여러 개념과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선호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컨조인트 분석 (conjoint analysis)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을 추가하고 조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일반 설문지를 활용하여 통일 시기, 비용, 방식 등을 독립적 문제로 조사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종속성 및 특정 변수의 선호 강도는 파악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조사연구의 성과를 참조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컨조인트 분석 (conjoint analysis)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통일방식 선호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 통일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시기에 대한 인식이 초점이었다면 본 연구는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진행되었던 한국 국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과 시기 적정성 인식 조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한국 국민이 어떠한 복합적 통일상(相)을 지지하고 어떠한 통일방식을 반대하는지의 찬성이나 반대의 여부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정도까지는 알 수 없다.

즉, 기존 연구에서 통일이라는 복합적 현상을 다층적으로 분해해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점은 기존 설문지 방식이 국민의 통일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보충하고자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기로 한다. 또한 통일 인식 조사를 할 때 통일 이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인 북한 정치조직 청산

문제, 지도부 청산 문제, 군대 정리 문제, 남북간의 이동 문제 등은 기존 통일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서 제기되었으나 통일인식조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여 통일인식을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어 이러한 변수들이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통일한국을 단일체로, 통합 기간을 무기한이 아닌 10년 이내, 1% 수준의 통일세 등 기존 연구에서 통일 방식, 기간, 통일비용 등의 조건에 대한 선호 강도의 측면을 밝혔다. 둘째, 반중 감정이 반영된 결과로서 북한 치안 유지와 핵무기 관리에서 중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과거사 청산에 있어, 기존 연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의미한 결과가 드러났다. 북한 지도부의 기소 선호와 노동당 당원의 민감한 직위 배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 과거사 청산은 통일인식과 실질적 통일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북한군 정리 문제와 남북 간의 이동제한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이 두 변수는 한국국민들이 통일 시나리오 선택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뚜렷한 국민의 선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진영, 세대, 성별 등 여러 소집단 분석에서도 거의 모든 속성에서 같은 결과가 관측되어 남한의 일반 국민 통일방식에 대한 여론이 갈등보다는 합의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이어 본 연구의 설계와 방법론을 설명하고 표본집단의 주요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 후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II. 선행 연구 검토

통일방식과 관련해서 한국과 북한은 각국 서로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시켰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 여러 단계에 걸쳐 남북의 점진적 통합을 강조

해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남북연합-연방제-완전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방안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 담론에서 통일을 일종의 단계적 과정으로서 낮은 단계에서 연합부터 시작되어 연방제에 걸쳐 민주국가까지 귀착된다(고유환 2014). 이와 유사하게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의 공개적 통일방안도 점진적인 단계적 연방제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배영애 2007). 이런 방안들은 부분적으로 기존 통일인식 연구에서 조사되기도 했다.

한국의 통일인식 연구는 6.25 전쟁 이후부터 여론조사기관 및 언론사들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다(고유환, 2014).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통일의식을 분석한 기관으로는 KBS(2005, 2010-2022) (KBS 202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07-2022) (김범수 등 2021), 그리고 통일연구원 (1994-1999, 2003, 2005, 2008, 2014-2022) 등이 있다(이상신 등 2021). 이 기관들은 통일의식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접 단답형 다항선택식 문항으로 통일의 필요성(통일 찬반), 통일관(통일의 당위적 이유), 적정 시기 혹은 가능성, 통일비용과 통일세에 대한 태도, 통일한국의 정치제도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 기관들은 조사한 변수들로 한국의 통일인식 변화와 여러 집단 간의 의식 결정요인 등을 추론적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및 엔케이소셜리서치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2014-2022)를 진행하여 한국인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북한 과거사 청산 문제의식을 기술적 통계를 통하여 정리하여 왔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22).

이 기관들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 정치-인구학적이나 사회학적 요인으로 통일의식이 형성된 연구가 있는가 하면, 가변적 요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당국의 행태로 통일의식이 변동되는 데에 집중하는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남북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한다(김병로 2017, 157-184; 김진환 2019, 381-411). 또한 한국 경제 상황 등 주로 북한 당국 및 남북관계와 무관한 중요 변수들도 한국 유권자들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정동준 2017).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인구학적 특정 계층의 장기화된 인식이나 정치적 정체성으로 초래된 사회 계층의 고착화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단기적 인식 변

동 추이 혹은 우발적 사건에 따른 인식 변동의 요인을 이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반면, 장기성을 지닌 사회학적 요인이나 정치학적 요인을 통일의 필요성 및 적정 시기/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 가령, 정치 성향 및 당 파심, 통일 편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에 따른 선호가 달라진다는 분석이 있다 (정동준 2016; 이성우 2020; 이내영 2014; 최우선 등 2016; 윤민재 2017). 또한 시계열-횡단적(time series cross-sectional) 데이터(KINU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여 연령-기간-코호트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 이후 APC 분석)을 통해 통일의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즉, 통일의식 변화에 있어서 어느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밝혀내기 위한 방법론들이 시도되었다 (구본상 2021). 이외에도 최근에는 성별 간의 통일의식 격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본상 2020).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어떠한 통일을 지지하는지를 기간, 단일 또는 연합 같은 정치제도, 비용 등의 요인으로 단축(단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통일 방안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남북 이동 문제 (최은석 2011; 송진호 2017; 제성호 2018), 과거사 청산 문제 (김수암 등 2014; 북한인권 정보센터 2022, 83), 남북 경제통합 (이석기 등 2013), 남북군 통합 및 이북 군대 주둔 문제 (김의석 2017; 정훈 2018; 김열수 2012) 등은 통일인식조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기존 통일인식 연구에서 통일 필요성과 적정 시기가 정부의 기본 대북 정책 방향설정과 맞물려서 통일 교육의 추진에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구체적인 통일 방식은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됐던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과 통일교육이 어떠한 구체적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정도에 바탕을 두는 것도 아니다 보니 당연히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의 통일 시기 등의 요소들은 불확실한 만큼 미리 국민의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결국 동서독에서 볼 수 있듯, 산사태처럼 갑작스럽게 올 수 있는 남북통일에 있어서 통일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구체적 선호를 아는 것은 통일 준비의 핵심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민의 통일 방식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는 직접 단답형 다항선택식 문항의 조사법을 통해 실시된 설문조사로 구축된 횡단적 데이터 혹은 시계열횡단적 데

이터를 활용해 여러 집단(세대, 지지정당, 이념성향, 성별 등) 별 응답자의 통일 필요성, 통일세, 통일관 등 선택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를 구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시계열 데이터의 비축에 따라 APC 분석도 활용하여, 인식의 여러 측면을 복합적 시간 종속적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특정 코호트나 기간효과보다 연령효과는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성별, 지지정당, 이념성향 등 다른 예측변수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문제와 통일 후의 많은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론상 대단한 연구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문항의 선택지에 대한 응답자의 상대적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조사법을 통해서 파악하기 어렵다. 더불어 구체적 통일 시나리오라기 보다 지표인 ‘필요성의 감정 강도’, 통일세, 적정 기간 같은 반응변수를 하나씩 선행 회귀분석이나 구조방정식으로 예측 변수를 찾는 데에 그쳤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통일 방안과 통일 후 남북통합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광범위하게 많지만 대부분 제도통합 문제 같은 행정구조 변모 문제와 과거사 청산 등의 정치 문제는 그동안 통일의식조사에서 다루이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 어떤 방법론으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데이터 및 방법론

본고는 선택을 기반으로 한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choice-based conjoint analysis)을 활용한다. 이 연구방법은 통일방식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변수를 찾아내는 데에 유용하다. 이 방법론은 국내외 마케팅계에서 이용된지 30년이 넘었으며 (Eggers 등 2022), 최근 해외 사회학계에서는 특히 이민 차별과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Bansak 등 2021). 이 연구방법은 선택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Attribute)을 구체화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각각의 선호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각각의 문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시나리오 2개로 구성된 자극물(프로필)을 보고 선호에 따라 하나의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이후 선택한 시나리오 안에서 구성된 자극물(프로필)을 1-7 척도로 선호 점수를 매긴다. 응답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8번에 걸쳐 자극물(프로필)에 대한 선호 점수를 매긴다. 또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강건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가설의 필요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일례로 7번째 자극물의 시나리오를 선택한 후 서술형 텍스트로 “이 제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이 나온다. 본고의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시나리오 2개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설명도 필요하다. 응답자가 받은 설문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이 통일에 대해 전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북한과의 평화적 통합이라는 대의를 이루었다고 가정했을 때, 통합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에는 두 개의 가상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각 정보 제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항목 두 개씩 표시해 주십시오. 총 8항목이 나옵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상의 상황을 다룹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호하는 항목을 두 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통일 시나리오의 속성, 나타날 수 있는 속성수준, 그리고 기존 조사연구의 해당 문항은 표1과 같다. 기존 연구의 문항을 세분화한 항목도 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기존 통일의식 학술 연구에서 잘 다루지지 않았던 과거사 정의 문제, 특히 인권유린 가해자의 공직배제 문제와 조선노동당 당원 정리 문제 등까지 실제로 실현된 통일에서 현실 문제로 제기될 것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김수암 등 2014). 한편, 기존 통일의식조사에서 진행하였던 주변국의 통일 기여 혹은 방해 역할 인식에 대한 문항을 실제로 통일되었을 경우, 북한 지역 치안과 평화 유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북한에 군대 주둔” 및 “북한 핵무기” 속성으로 변경했다. 또한 주로 통일방안 연구에서 다루졌으나, 통일의식 조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경제 통합 및 영토의 통합 과정에서 한국 경제 주체의 참여 문제 및 남북 간의 경계선 관리 문제 등의 속성도 포함시켰다. 다음의 표는 속성, 속성의 수준, 그리고 그 수준과 관련된 기존 조사 문항을 정리하였다.

〈표 1〉 속성 수준 및 기존 연구에서 해당된 문항 혹은 해당 기존 기타 연구

| 속성 설명 | 속성의 수준 | 기존연구의 해당 문항 혹은 관점 |
|-------------------------------|--|---|
| 통일 후 정치 체계 | 연방제 통합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남북 통합 독재적 일당 체계에서 남북 통합 | 단일제 통일 및 연합제 통일지지 (이상신 등 2021, 51-54) |
| 이행 기간 | 즉시 이행(1년 미만) 단계별 이행(1~5년) 무기한 연기(6년 이상) | 통일의 가능성 및 시기 (김범수 등 2022, 390; KBS 2021, 158) |
| 통일세 | 국민 전체 소득의 1% 국민 전체 소득의 5% 국민 전체 소득의 10% 상위 10% 소득자 소득의 10% | 통일세 (KBS 2021, 176; 이상신 등 2021, 308) |
| 남북 이동 제한 | 광범위하게 즉시 완전 개방 국경을 넘는 이동에 대한 허가 필요 3년 동안 광범위한 폐쇄 유지 10년 동안 광범위한 폐쇄 유지 | 통일 후 이남 이동 제한 및 남한 이주 연구 (최은석 2011; 송진호 2017; 제성호 2018) |
| 북한에 군대 주둔 | 군대 부재, 미주둔 한국 군대만 미국 및 한국 합동군 UN 평화유지군 미국과 중국의 안정화 합동군 | 통일에서의 주변국 통일 역할 평가 (KBS 2021, 145); 외교관 계 문항 (김범수 등 2022, 395- 397); 급변사태연구 (김열수 2012) |
| 새로운 정치 체계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참여 | 조선노동당원에 대한 제한 없음 민감한 직책을 제외한 조선노동당원의 참여 허가 조선노동당원의 참여 금지 | 과거사 등 공직배제 문제 연구 (김수암 등 2014) |
| 남북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 제한 없음 북한 기업과의 합작투자에만 기업 허용 북한에서 기업 운영 금지 | 남북경제통합 방안 연구 (이석기 등 2013) |
| 북한군 상태 | 북한군 해산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 통합 | 남북한 군통합방안 연구 (김의식 2017) |
| 북한 핵무기 | 국제 연합에서 관리 한국 기관에서만 관리 미국 및 중국 연합에서 관리 남북 공동 연합에서 관리 | 북핵문제 해결 (KBS 2021, 123, 182); 위 북한에 군대 주둔 항목 도 참조 |
| 북한의 리더십 | 기소 없음 한국에서 기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 재판 없이 즉시 집행 |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 (북한인권정보센터 2022, 83) |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존 조사 문항과 항목을 활용하여 속성과 속성수준을 구성하였다. 기존 설문 조사와 연구에서 통일한국의 최적 정치 체계, 통일 시기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기 때문에 이는 통일인식 연구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통일이라면 재정적 부담 관련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 부분도 감안하여 속성 수준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 통합과 관련해서 남북 이동, 북한의 군대 주둔과 북한군 상태, 한국 기업의 대북 진출, 북한사회에서의 기존 내부자인 노동당 당원 참여와 북한 엘리트 청산 등 중요하면서도 아직까지 통일인식 조사 연구에서 간과되었거나 드물게 다루어진 문제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통일 시나리오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실제 남북 사회와 정치 제도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들로 속성수준을 설계하고자 했다. 이로써 통일 조사 인식 연구의 지평선을 넓히고자 했다. 〈표 2〉에서 자극물의 예시를 볼 수 있다.

〈표 2〉 자극물의 예시

이 시나리오는 가상의 상황을 다룹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호하는 항목을 두 개씩 선택해 주십시오.

| | 시나리오 A | 시나리오B |
|------------------------------|-------------------------|---------------------|
| 통일 후 정치 체계 | 연방제통합 |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남북 통합 |
| 이행 기간 | 즉시 이행(1년 미만) | 단계별 이행(1~5년) |
| 통일세 | 국민 전체 소득의 5% | 국민 전체 소득의 1% |
| 남북 이동 제한 | 광범위하게 즉시 완전 개방 | 국경을 넘는 이동에 대한 허가 필요 |
| 북한에 군대 주둔 | 군대 부재 | UN 평화유지군 |
| 새로운 정치 체계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참여 | 조선노동당원에 대한 제한 없음 | 조선노동당원의 참여 금지 |
| 남북 경제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 북한 기업과의 합작투자에만 기업 허용 | 제한 없음 |
| 북한군 상태 | 북한군 해산 |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 통합 |
| 북한 핵무기 | 미국 및 중국 연합에서 관리 | 남한 기관에서만 관리 |
| 북한의 리더십 | 기소 없음 |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 |
| 두 개의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선호 하십니까? | 시나리오 A ○ | 시나리오 B ○ |

두 개의시나리오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하십시오. 1 =매우 반대함, 7 =매우 동의함

| | | | | | | | |
|--------|---|---|---|---|---|---|---|
| 시나리오 A | 1 | 2 | 3 | 4 | 5 | 6 | 7 |
| 시나리오 B | 1 | 2 | 3 | 4 | 5 | 6 | 7 |

표본과 관련하여 응답자 수는 2,009명이며, 응답자의 각 자극물 시나리오 선택은 한 응답이 되어 각 응답자는 자극물을 총 8번에 걸쳐 선택한다. 분석단위는 응답자가 아니라 응답이기 때문에 실효 표본집단의 규모는 32,144 개 (2,009명 x 각 자극물 시나리오 2개 x 자극물 총 8번)로 집계된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3>와 같다.

<표 3> 응답자의 특성

| 연령 | 횟수 (미가중 비율) | 가중비율 |
|-----------------|-------------|------|
| 20-29 | 318 (16%) | 16% |
| 30-39 | 319 (16%) | 16% |
| 40-49 | 387 (19%) | 19% |
| 50-59 | 410 (20%) | 20% |
| 60+ | 575 (29%) | 30% |
| 성별 | | |
| 여성 | 990 (49%) | 50% |
| 남성 | 1,019 (51%) | 50% |
| 지역 | | |
| 부산, 울산/경남도 | 303 (15%) | 15% |
| 대구/경북도 | 198 (9.9%) | 10% |
| 대전, 세종/충청도 | 219 (11%) | 11% |
| 광주/전라도 | 203 (10%) | 10% |
| 강원도/제주도 | 78 (3.9%) | 4.0% |
| 서울, 인천/경기도 | 1,008 (50%) | 50% |
| 교육 | | |
| 무학 | 3 (0.1%) | 0.2% |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10 (0.5%) | 0.5% |
| 중학교 졸업 | 24 (1.2%) | 1.2% |
| 고등학교 졸업 | 354 (18%) | 18% |
| 대학 자퇴 (전문대학 포함) | 44 (2.2%) | 2.2% |
| 대학교 졸업 | 1,342 (67%) | 66% |
| 대학원 이상 | 230 (11%) | 11% |
| 기타 (서당 등) | 2 (<0.1%) | 0.1% |

선택형 컨조인트 조사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평균한계항목 효과(Average Marginal Component Effect: AMCE)와 한계평균(Marginal Mean: MM)을 구한다.¹⁾ AMCE는 당연한 참조범주가 있을 경우, AMCE부터 구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 설계 속성 수준의 경우, 대부분 당연한 참조범주가 없기 때문에 분석은 한계평균(Marginal Mean: MM)에 집중하고자 한다. MM을 도출해서 통일 시나리오가 선택될 확률에 각 속성수준의 영향을 참조범주 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속성수준의 MM은 그 속성수준이 들어간 모든 프로필의 선택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MM을 구할 때,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활용한 정규방정식 회귀분석(OLS)을 이용한다 (Hainmueller 등 2014, 14-15). 이 모형에서 반응변수는 통일 시나리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진반응변수(binary response variable)이며, 각 속성수준마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추정된다.²⁾ 또한 강건성 테스트(robustness test) 일환으로 7번째 자극물을 보고 프로필 선택을 하고 점수를 매긴 후 다음과 같은 개방형 서술 응답을 구한다.

“이 제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응답을 갖고 기본 모형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테스트로 삼아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자연언어)에서 잠재적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주제모형(Topic Model)을 적용함으로써 시나리오 선택에 있어 어떠한 속성수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재확인한다 (Blei 등 2003). 각 주제에 가장 연관관계 높은 단어(알파 값; Alpha Score)를 시각화해서 응답자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양적 자연언어처리 방법론에 기반한 응답의 이면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각 주제에 가장 높은 점수(감마 값; Gamma Score)를 대표적인 용어로 활용하여 서술 응답에서 나온 주요 논점을 보기로 한다.

-
- 1) 기본적으로 이 값은 프로필 속성수준이 나올 때 획일적인 임의로 나오고 프로필관련 한계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각 속성수준의 AMCE는 각 속성마다 한 수준을 참조범주로 삼고 각 속성수준은 참조범주와 모든 다른 속성수준의 평균적으로 선택될 확률값에 대비한 확률값이다. 0.0이상이면 프로필의 선택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0.0이하라면 프로필 선택의 확률을 낮춘다.
 - 2) 인터넷 부록에서 점수 매김 응답도 분석 및 강건성을 재확인하기로 한다. 인터넷 부록 및 본 연구의 데이터를 https://github.com/scdenney/Korean-unification_conjoint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8월-9월에 인구학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중치로 구성된 할당표집을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조사기관인 라쿠텐 인사이트(Rakuten Insight)의 (n=1,666)과 Cint(n=343)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³⁾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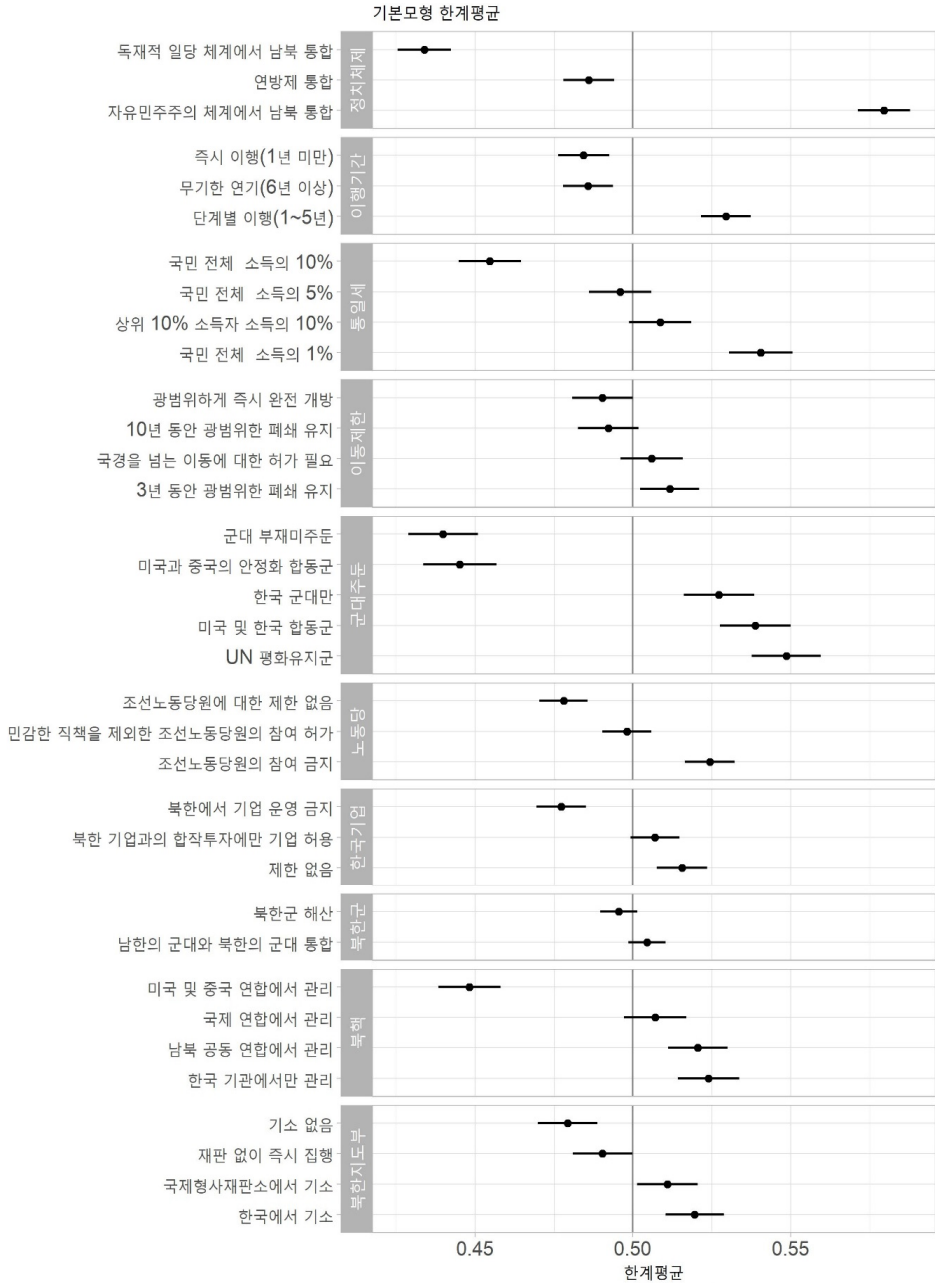
우선 기본모형의 분석을 보기로 한다. 기본 모형을 한계평균과 선호 확률 분위별의 시각화를 보고 기본모형에서 볼 수 있는 함의점들을 요약하겠다. 또한 기본 모형의 분석결과를 더욱 튼튼하게 확증하기 위해 응답자의 서술형 문항에 답변한 내용을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를 통해 해석하고 강건성 테스트 및 미시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 후 서술형 응답의 분석과 하위 집단(정치성향, 성별, 소득분포, 세대 등)의 분석 결과를 보기로 한다. 후술하겠지만 기본 모형에서 통일 후 정치체제관련 함의를 제외하면 모든 하위 집단에 분석결과가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 컨조인트 모형 분석

기본 모형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은 기본 모형의 한계평균(Marginal Mean: MM)의 시각화이다. 해석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면 0.5이상이면 통일 시나리오 선택의 확률을 높이고 0.5이하라면 선택의 확률을 낮추며, 딱 0.5로 나타나면 선택확률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0.5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통일 시나리오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각 속성수준의 자세한 선호 확률을 볼 수 있다.

3) 라쿠텐 패널 조사의 60대 이상 무응답 문제로 인해 Cint (설문기관)를 보충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중치로 과소-과다 표본추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림 1〉 기본 모형 MM



관측값은 속성수준의 평균결과값이다. 속성수준은 .5 이상인 경우, 시나리오 선택 편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차범위는 95%로 설정되었다.

〈그림 1〉를 갖고 기존 조사연구 결과와 비교해서 보자면 MM 시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일 후의 정치 제도 속성에서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남북 통일”이라는 속성수준이 선택된 프로필 비율을 0.6 이상으로 나타냈으며, “독재적 일당 체계에서 남북 통합”의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또한 연합제는 0.5 이하로 나와 기존 연구에서 단일제보다 연합제 통일을 선호한다는 결과에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제나 권위적 정치제도 하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단일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은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로 통일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는 통일 적정시기 혹은 가능성 등 기존 연구 문항을 통일된 상태라는 전제조건으로 바꾸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중기적 속성수준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으로 높은 반면에 즉시 이행이나 무기한 연기를 반대하는 선호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 통일 시기의 문항과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김범수 등 2022, 46-47; KBS 2021, 35-36), 이미 통일이 기정사실화가 되면 이행을 너무 짧거나 길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시기에 있어, 기존 조사방법론으로 포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가상 통일이나 통일이 실현된 전제 하에서 통일관련 문항이 개별적으로 발달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통일세관련 응답은 기존 조사와 비슷한 것으로 비용이 낮을수록 좋다는 추이가 나타난다(KBS 2021, 46). 다시 말해, 통일비용은 일반적인 재정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대 담론에서 통일은 대민족 화합이나 민족의 운명으로 논의될지 몰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하게도 어떠한 추상적 결과물보다 직접 부담하는 세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통일의 개인적 금전 부담의 최소화를 추구하면서 남한 경제 주체인 남한 기업의 북한 경제 참여에 대한 선호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선호로 풀이된다. 즉, 당연하게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이고 간접적으로나마 수혜할 수 있는 이익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 논리는 탈북자 창업이나 정착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다.

기존조사에서 포착된 통일관련 반중 여론은 군대 주둔과 북핵관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에 군대를 주둔하지 않는다는 속성수준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반

면, 군대 주둔과 북핵관리 문제에 있어, 그 외의 속성수준은 군대 주둔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중국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군 혹은 한미합동군 혹은 UN 평화유지군에 대한 선호가 같은 오차 범위 내에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북핵관리관련 속성수준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 다만 중국이 북핵 관리에 관여 등의 중국관련 속성수준을 제외할 때, 통일 시나리오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적다.

과거사 청산 문제로 볼 수 있는 노동당 당원 정리 문제와 북한 지도부 속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정치질서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대부분이다. 통일 국가의 행정에서 노동당 참여 금지와 노동당 당원에 대한 제한 없다는 속성수준이 시나리오의 선호도 선택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기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동제한과 북한군 해산 문제관련 속성수준들은 통일 시나리오 선택에 있어 별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Denney and Green 2024). 즉, 민족 공동체의 수립이나 강대국의 건설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수호 여론이 통일 방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선호도 순위별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2에서 나와 있듯 시나리오 선호 확률의 하위 25%, 중위 50%, 그리고 상위 75%로 나누어 최적화된 통일 시나리오와 최저의 선호도 그리고 중위값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림 2〉 분위별 추정된 통일 시나리오 선호 확률



표는 통일시나리오 선호 확률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추정치 분포의 최저분위, 50분위, 그리고 최고분위를 보여준다.
추정치는 보정된 표준오차 이항식 로그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오차 선은 95%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소결을 논의하자면 기본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 후의 정치체제, 통일세, 북한지역 군대 주둔 문제, 이행기간이 통일 시나리오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 부록에서 하위집단 분석 결과도 기존 연구와 달리 통일방식의 선호에 있어 대부분의 차원에서 정치성향/당파심, 성별, 나이(세대로 묶었을 경우), 소득분포에 따라 기본 모형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다. 유일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통일 후 정치체제에 있어 진영 간의 유의미한 차이로 보수-중도는 연방제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진보적 응답자(진보정당지지, 정치성향 응답)가 연방제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선호도가 나온다. 그렇지만 다른 속성수준에 있어, 하위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포착되지 않았던 점에서 기본 모형은 일종의 통일 방식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잠재적 대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더 세부적으로 인터넷 부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연어처리 분석을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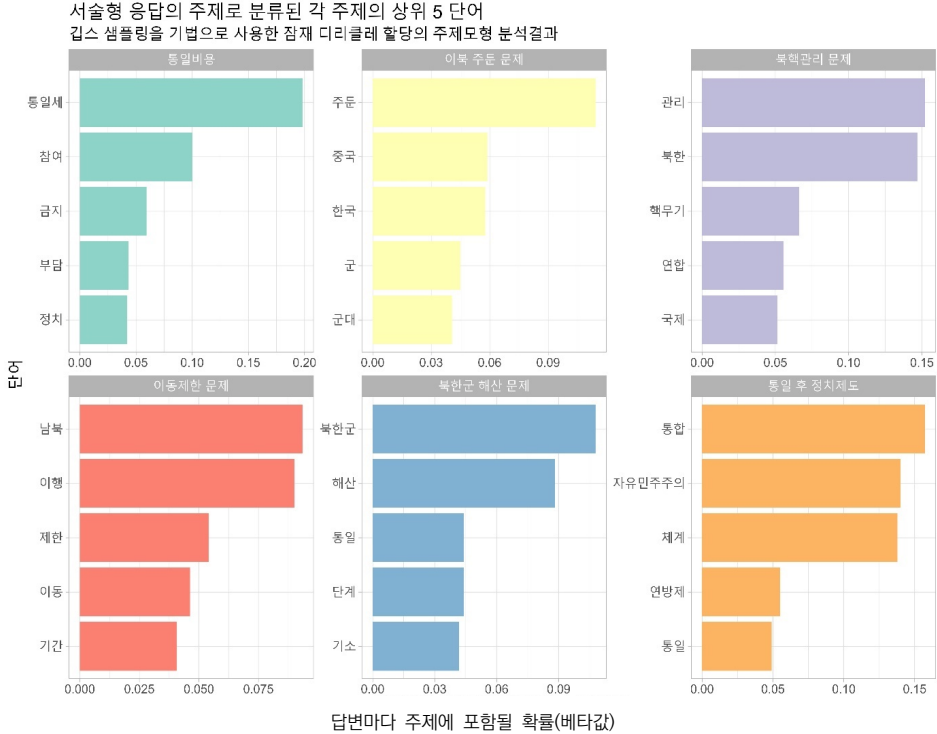
나. 자연어처리 분석

한국어의 접미사, 조사 등은 모형을 분석할 때 데이터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명사를 추출하여 그 명사를 위주로 자연어처리 분석을 하기로 했다.⁴⁾ 본 절에서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를 한 후 도출할 수 있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보고 그 주제에 배경이 되는 단어를 시각화 한다.⁵⁾ 이는 아래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4) 또한 무의미한 응답도 제외하였다.

5) 주제 도출 방법은 언어 모델의 평가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는 필플렉세티 점수(직역하자면 '헛갈리는 정도')를 활용했다. 여러 모형을 검토한 결과 6개의 주제로 나뉜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필플렉세티 점수인 7개보다 적게 모형을 설정해서 시각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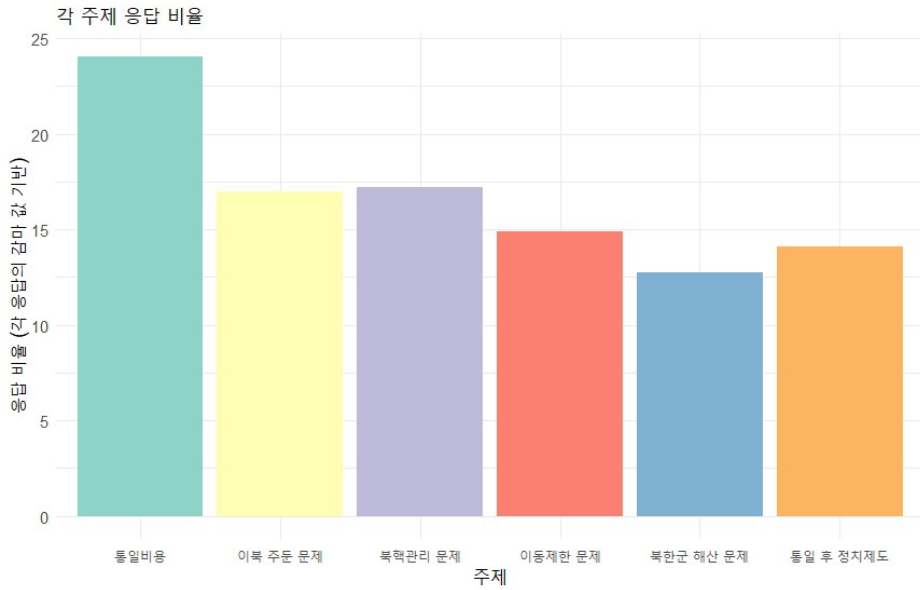
〈그림 3〉 주제 모형 결과



모형을 적용한 후 주제 명칭을 부합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6개의 주제를 봤을 때 속성 수준에서 선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들은 특히 통일세와 북한 지역의 중국군 주둔 문제, 자유민주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 후 경제에 있어 통일세와 남북 간의 이동 문제가 부각되었다. 지정학적 요소로서 주둔과 핵관리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과거사 청산(북한군 해산 문제 등)과 통일 후 정치제도 같은 정치적 주제도 나왔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 4에서 각 주제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최고 감마 값 (gamma values)을 바탕으로 서술형 응답의 주제 비율을 보여준다.⁶⁾ 통일비용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다른 주제들도 일정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6) 주제모형을 적용할 때 문서가 각 주제에 등장할 확률로서, 각 문서별로 감마 값이 부여된다.

〈그림 4〉 감마값으로 본 응답 주제 비율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높은 세율에 대한 거부감과 통일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와 남한 기업활동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서술 응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세가 사회 상류층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부각되며,⁷⁾ 북한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은 통일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단계별 통합과 남한 기업의 활동도 중요한 요건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통일세의 해당자가 상위 10퍼센트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통일 이행도 즉시하는 것보다 단계별로 하는 편이 좋아보였고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체제의 토대를 만들기위해 기업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활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남북의 이동제한에 있어서, 이동 제한에 대한 위험성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제한도 아예 없이 통일되면

7) 참조로 현재 독일의 연대할증(Solidaritätszuschlag)은 최근까지만 해도 기본 과세표준을 1.055(5.5%)으로 곱해서 추가된 세금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KBS 뉴스, 2019/08/27).

안된다는 응답, 그리고 특히 정치경제의 오래된 분단에 따라 과도기적 이동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남북이동 제한이 일정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남북이동 제한에서 즉시 완전개방은 엄청 위험하다. 분단의 세월만큼 천천히 가야한다.”

이와 함께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치경제의 통합과 관련해서 통일 후 정치제도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 자유민주주의 혹은 연방제 선호, 일당독재 반대 그리고 한국의 진보진영,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반대여론과 같은 것까지 확장하여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정치 체계에 대해 조선노동당의 참여도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할 것 같다”

“연방제 통합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남북 통합을 원함”

“연방제 통합이라서 [찬성함]. 독재적 일당 체계에서 통합은 안된다.”

국방력은 경제와 국가의 정체성 보장과 국가의 능력에 있어서 중대한 주제인 만큼 여러 응답이 나왔다. 북한지역 군대 주둔에 있어, 기본모형과 같이 중국 주둔 반대와 한국 관리의 선호 등도 제기되었다.

“A의 북한지역의 군대 주둔에서 중국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지 않음”

“핵무기부터 북한에 군대 주둔 등 모든것이 한국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다”

“한국 주도 통일 시 왜 중국의 군대가 주둔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음.”

또한 통합 과정에서 북핵관리에 대해서도 여러 언급이 있었다. 특히 남북 공동 북핵관리와 국제적 북핵관리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외국인들이 관리하는것 보다는 남북한이 같이 관리하는게 좋지. 언제까지 외국인들의 참견을 받을 것인가”

“북한 핵무기 관리에 있어 국제연합이 관리하는게 마음에 들어서”

“북한에 군대 주둔과 북한 핵무기 관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개입하면 국제문제로 비화해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각국 이해관계가 개입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군해산에 관해서 여러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군 해산 보다는 공동 연방 군대 유지.”

“북한군 해산은 무조건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컨조인트 분석과 주제모형을 통한 양적분석, 그리고 서술 응답을 통한 질적 분석으로 살펴볼 때, 한국의 통일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 정책을 설계할 때 국민여론과 그 선호도를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젊은 사람들의 통일 반대의식, 세대간의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 정치진영 간의 차이, 가변적 요인에 따른 인식 변동과 변화 등 여러 시각이 제시되었다. 본고는 통일인식과 관련하여 단순한 통일 찬성 여부와 적정 시기에 대한 결정요인 논쟁에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통일 방안을 설계할 때 유용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통일인식의 요인과 교육을 통해 ‘정비’되어야 할 ‘그릇’된 인식의 문제를 어떠한 인구학적이나 가변적 요소와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본 연구는 한국인의 통일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일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통일정책을 설계할 때 한국인의 인식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조사는 가상 통일에 대한 찬반도나 적정 시기 등만 측정할 수 있을 뿐이지 통일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직접 측정하지 않거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가령, 만약에 통일될 경우, 남북 간의 이동 문제는 내부 이주로 인한 거주 문제, 노동시장 불안 등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시사되고 남북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기존 조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민주화의 여론과 대기업의 적절한 정치적,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그렇지만 아직 기존 조사에서 북한 발전과 남북 통합에 있어, 대기업에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가 등장하지 않았다.

본고는 컨조인트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 방식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통일될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기존 연구와 달리 통일 적정 시기는 통일이 기정사실인 경우 이행기를 길게 설정하거나 즉시 이행기 종결이 아닌 단계별 통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일세에 대한 선호는 낮을수록 좋다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전체 국민이 부담되는 가장 높은 세율과 가장 낮은 세율의 속성수준에 대한 (비)선호도가 강하고 그 외의 속성수준의 선호도가 시나리오 선택을 할 확률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북한지역의 군대 주둔 문제와 핵 무기 관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중 감정은 통일방식 선호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북한 지도부의 청산을 지지하고 노동당 당원의 행정 참여는 반대하는 등 뚜렷한 선호가 보인다.

자연언어처리 결과도 비슷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의 조사에서 기존 통일인식 조사연구 문항으로 다루어졌던 통일 비용과 통일 후 정치제도에 대한 서술 응답 비율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통일인식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논점들인 이북 군대 주둔 문제, 북핵 관리 문제, 이동 제한 문제 그리고 북한군 해산 문제가 본고의 조사에서 제기된 점은 국민의 통일인식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통일인식 조사를 설계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점이라고 본다.

본고는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 조사의 방법론적 문제들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다. 직접적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방법론상 통일관련해서 사회 바람직한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 문제 등 개인의 상대적이고 잠재적 선호도를

파악하기데 한계가 있다. 통일에 있어서 각 주요한 요소에 대한 개인의 선호강도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시적 정치제도에 대한 선호에 비하면 행정에 있어 노동당 당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선호가 약할 수 있으며, 한 속성 내에서 여러 속성 수준이 존재하고 그 중에 특히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수준과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성수준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측정하지 못했던 선호의 강도를 밝힐 수 있었다.

아직까지 선호를 측정하는 컨조인트 분석방법과 같은 방법론이 통일인식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통일 방식과 정책 설계에서 이러한 방법론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가 통일을 실질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불가능하기에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구체적이고 정밀한 방안이 요구된다. 즉, 일반 국민 조사를 할 때 통일 필요성이나 적정 시기 등에 대한 추상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시나리오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방법론도 고려해서 혁신적이고 대중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통일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투 고 일 : 2024. 01. 03.

심사완료일 : 2024. 01. 24.

게 재 일 : 2024. 02. 28.

참고문헌

국내

- KBS, 2021. 『2021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서울: KBS 남북교류협력단.
- 유광석. 2019. “독일, ‘통일세’ 폐지… 배경은?.” 『KBS 뉴스』 8월 27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71244>.
- 고유환. 201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통일인문학』 제60집.
- 구본상.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에서의 성차 검증: 여성평화가설의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5호.
- _____. 2021. “연령-기간-코호트 분석: 통일 및 대북 인식,” 통일연구원 편.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서울: 통일연구원. pp. 179-228
- 김범수·김병로·김병연·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최현정. 2022.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범수·김병로·김성희·김학재·이성우·최은영·황수환·김민지. 2022.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병로. 2017.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통일과 평화』 제9권 2호.
- 김수암·백범석·조정현. 2014.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 서울: 통일연구원.
- 김열수. 2012.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군사개입: 목적·양상·형태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9권 2호.
- 김의식. 2017.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시 북한군 통합 방안 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권.
- 김진환. 2015. “기획 특집: 광복, 분단 70년 그리고 통일: 남한 국민의 대북의식과 통일의식 변천.” 『현대사광장』 제6 권.
- 김진환. 2019.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의식 변화.” 『경제와 사회』 123호.
- 류덕현·홍석철·주영찬·조용신. 2019. “기존 통일비용 연구 평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수탁과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서울: 통일부.
- 박균열. 2013. “정부주도 통일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적 연구.” 『윤리연구』 제1권 88호.
- 백대현·이재완. 2015.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2. 『2022 북한인권예 대한 국민인식 조사』.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송진호. 2017.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 『사법』 통권 41호.
- 온기수. 2010.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제2집 2호.
- 윤민재. 2017.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 21』 제8권 5호.
- 이내영.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 이상신·민태은·윤광일·구본상. 2021.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 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서울: 통일연구원.
- 이석기·김석진·정근주. 2013.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서울: 산업연구원.
- 이성우. 2020.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6권 제4호.
- 정동준. 2016.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5호.
- _____. 2017.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 분석.” 『담론201』 제20권 3호.
- 정훈. 2018. “남북한 군사통합 시 갈등관리 연구.” 『군사논단』 제95권.
- 제성호. 2018. “대량탈북-급변통일 시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에 대한 법적 대응.” 『북한학보』 제43권 1호.
- 최우선·황태희·최영준·주형민. 2016. “통일인식 차이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 최은석. 2011.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남북법제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 함인희·한정자. 2000. “집단별 통일의식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여성·386세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5권.

해외

- Bansak, Kirk, Jens Hainmueller, Daniel J. Hopkins, and Teppei Yamamoto. 2021. “Conjoint Survey Experiments,” in Donald P. Green and James N. Druckman,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ei, David M., Andrew Y. Ng, and Michael 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Jan). pp. 993-1022
- Eggers, F., H. Sattler, T. Teichert, & F. Völckne. 2022. "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in C. Homburg, M. Klarmann, A. Vomberg, eds. *Handbook of Market Research*. New York: Springer.
- Green, Christopher, & Steven Denney. 2024. Why do democratic societies tolerate undemocratic laws? Sorting public support for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South Korea, *Democratization*, 31:1, 113-131.
- Hainmueller, Jens, & Daniel J. Hopkins. 2015. "The Hidden American Immigration Consensus: A Conjoint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 no. 3. pp. 529-48.
- _____, & Teppei Yamamoto. 2014. "Causal Inference in Conjoint Analysis: Understanding Multidimensional Choices via Stated Preference Experiments," *Political Analysis* 22, 1. pp. 1-30.

South Koreans' Hidden Unification Preferences: Evidence from a 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Peter Ward · Steven Denney · Christopher Green

This article aims to measure South Korean popular preferences for various unification scenarios with North Korea by utilizing the conjoint analysis method, a method previously not used in unification perception research. Existing research examining preferences uses multiple-choice questions in observational designs covering the need for unification, the period in which it should happen, ideological views of unific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of a unified Korea. However, the relative preference for different potential unification scenarios cannot be measured using direct question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alone. Hence, this article utilizes a multidimensional conjoint experiment to examine how different components of a hypothetical unification scenario, including the post-unification political system, how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dealt with, the jobs that Korean Workers' Party members are permitted to hold, the involvement of South Korean firms in the post-unification North Korean economy, the dispatch of forces to the North *inter alia*.

Keywords: Unification, Perception, Conjoint Analysis, Public Opinion, North Korea